

국민의당 '김명수 동의안' 고민

도덕성 결격사유 없어 김이수 이어 연속부결시 역풍 우려 與 압박에 통과시 주도권 확보 어려움...자율투표 가능성

캐스팅보트 역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영향력을 보여줬지만 역설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파장을 커서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13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문회 결과를 보고 (당내 의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여민 입장을 가질 것인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찬성을 주장하는 측은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비칠 경우 초대

행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투항'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후 주도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에서는 김명수 후보자의 신상이나 도덕성 부분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시킬 경우 '정략적' 반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찬성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이유도 이 같은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면 무조

건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것인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역풍을 우려해 찬성한다면 다시 원내 협상에서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여당과 국민의당의 깊어진 감정선의 골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당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압박하고 있어 의원들 사이에 반발심리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김관영 사무총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협치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 그토록 우려한 패권정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주원 최고위원도 "국민의당은 존재감이나 힘을 보여주는 것 위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고뇌 끝에 투표를 한 것"이

라며 "우리를 땀방이나 부리는 강패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품격 없는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꼬이면 자빠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김이수 전 후보자 패처리 자율투표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국민의당의 입장은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응에서 결정될 것이라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좀더 냉각기를 가지면서 막후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고 그 이후에 인준안 처리를 시도하면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번 주 냉각기를 유지하고 다음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라 전망도 있다.

반면, 여권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돌파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에 대한 비판이 거센 만큼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의당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저임금·복지·탈원전 공방 與 호남 SOC예산 확대 해명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최저임금 및 복지정책,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제기한 비판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새정부의 호남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야당은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가 3조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운용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역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영세 사업장부터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복지예산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이 429조원으로 유례 없는 재정 확대로 편성됐는데, 재원조달 대책은 미지수"라며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과시하는 복지분야 예

산은 향후 나라 빛 중심의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저고용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민간 일자리 1개 늘어나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순리"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이재익 한국당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전성을 강조했고, 학계 저명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하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경주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당의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주장에 대해 "특정지역을 고려해 (예산)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호남이나 영남지역을 확대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윤호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결정되면 거의 2조원에 가까운 사업으로, 두 가지 노선에 대해 사업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호남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재정적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형호기자 khh@

서영교 복당...민주 121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원자격을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 의원에 대한 복당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지난해 7월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지난 7월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장 당원자격을 심사위원회와 중앙당 당원자격을 심사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서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다. 서 의원 복당으로 민주당의 의석은 120석에서 121석으로 한 석 늘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국민의당) 위원장이 13일 오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상정하자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가 권하는 '靑' "안 쓰면 성과평가 반영"

청와대가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올해 주어진 연차휴가를 다 쓰겠다고 하는 등 '실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과 분위기가 공직사회와 사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잔여 연차가 많으면 성과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박성진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산자위 민주 의원들 퇴장 속 의결...文정부 출범 후 첫 당청 이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표결은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사실상 여당 의원들의 묵인 속에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서 청와대의 인사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하는 이변이 처음이다.

산업위는 보고서에서 "신상 및 도덕성

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격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갈등은 물론 당정 균열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여야 간사는 전날부터 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부적격을 못 박는 반면 민주당은 입장 정리를 위한 연기를 요구해 왔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에도 별도 회동을 통해 야 3당의 부적격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전체회의의 전까지 상황에 변동이 없으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혁신위, 박근혜 자진탈당 권유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도...朴 1심 판결 후 최종 결정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탈당을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원권이 정

지된 상태로, 탈당을 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다. 탈당 권유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할 수 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예상 시점인 10월17일을 전후로 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혁신위의 결정에 대해 친박계는 즉각 반발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위의 결정이 성급했다면서, 정국회 대화(對與) 투쟁을 위해 꾀를 부려야 할 정국 상황에도 어긋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각종 모임·행사·세미나는 지리산 온천지구 K호텔 에서!

★ K호텔의 5대 특징 ★

- ▶ 깨끗하고 저렴한 객실요금
- ▶ 넓고 쾌적한 대형 세미나실
- ▶ 전망좋은 바베큐 시설
- ▶ 무료로 사용 가능한 노래방 시설
- ▶ 직접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식당
- ▶ 문의. 010-3605-5000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